
미국의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 현황 및
동향 파악
- 출장 보고서 -

2018년 10월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황도경 부연구위원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미국 저소득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현황을 파악

□ 과제명

-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에 건강보험료 추가 관련 효과분석

□ 출장기간

- 2018년 9월 23일 ~ 30일

□ 방문기관

- Dept. of consumer & business Service Oregon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 Oregon State University Center for Global Health
- Oregon Health Authority, Office of Health Analytics
- Utah Department of Health
- Intermountain Healthcare
- NFP Insurance consulting

□ 세부일정

년월일	행 선 지 (국가/도시)	방문기관/면담자	활 동 사 항
2018.09.23	미국 oregon		-인천에서 미국 오리건주로 이동
2018.09.24	saalem	Oregon Health Insurance Marketplace/Chiqui Flowers, Administrator	-주정부 차원의 Healthcare 프로그램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지원 현황 검토
2018.09.24	Corvallis	Oregon State University Center for Global Health/Chunhuei Chi	-미국 저소득층 및 소규모자영업자에 대한 SHOP프로그램 시행 목적, 지원 현황 및 운영상의 문제점 논의
2018.09.25	saalem	Oregon Health Authority, Office of Health Analytics/ Jon Collins, Director	-저소득층 건강보험 수급 확대 방안 논의 -소규모 사업체 건강보험 세액공제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검토
2018.09.25	utah		-오리건주에서 유타주로 이동
2018.09.26	Salt Lake city	Utah Department of Health/Norman K Thurston(US representative)	-주정부의 소규모사업자 및 근로자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인 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s(SHOP) 관련 지원 현황 및 문제점 논의 -소규모 사업체 건강보험 세액공제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검토
2018.09.27	Murray	Intermountain Healthcare/Peter Haug, MD	-유타주 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s(SHOP) 사업 평가
2018.09.28	Orem	NFP Insurance consulting/S David Jackson, Russ Johnston, Jonyce Bullock	-유타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추진 현황, 주정부와의 위탁 관계, 지원현황 검토
2018.09.29	인천		-유타주에서 인천으로 이동

2. 주요회의내용

1) Dept. of consumer & business Service Oregon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 일시: 2018.09.24.

○ 면담자: Chiqui Flowers, Nina Remple, Jangho Yoon(OSU)

- 미국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크게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대하여 행해졌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사회보장세를 인하하는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며 2014년 오바마 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
- 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은 건강 관리법(Affordable Care Act)의 소기업 건강의 시행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SHOP라고 칭하고 있음.
 - 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이하 SHOP)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 보험법에 의해 설립 된 시장이며 영세한 중소기업이 이 시장(market)을 통해 최적의 보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가격, 커버리지 등을 비교하여 영세 사업장 가입자를 위한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임.
- 미국 정부는 SHOP 마켓을 통해 건강보험 상품 구매과정의 단순화, 영세사업장의 의료 보장성 확대 그리고 보험료를 낮춤으로서 영세사업자의 구매력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SHOP시행을 위한 미국 연방정부의 방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는 각 주정부의 운영상의 지연, 마켓 운영을 위한 주정부의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 등이 원인이 되었음.
 - 보다 구체적으로는 SHOP을 거래할 수 있는 주정부의 웹 포털 사이트 구축의 지연, 보험사들의 비 적극적인 참여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Health and Human Services와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CMS)에서도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Affordable Care Act는 고용주를 위한 보험 시장을 개선하여 영세사업자 및 근로자가 건강보험 시장에서 보다 쉽게 상품을 찾을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자격을 갖춘 소규모 고용주는 건강 옵션 프로그램(SHOP)을 이용하는 영세사업자 및 그 근로자에게 적절한 건강 보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SHOP을 통해 보험을 가입한 영세사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세액 공제(Tax credit)까지 지원해 주고 있음.
 - 이러한 영세사업자는 연방정부 또는 각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기반 온라인(SHOP Marketplace)을 통해 쉽게 건강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SHOP 마켓 거래소의 필요성
 - 과거에는 많은 소규모 고용주가 자신의 근로자에게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를 원했지만 그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동일한 보험에 대해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는 대기업과 비교 약 10 ~ 18%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했기 때문임.
 - 소규모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만성질환자, 고비용이 소요되는 질환 등이 있는 대상자는 거의 모든 주에서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해 위험 분담(risk-pooling)이 크지 않아, 1~2명의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안 좋아 지더라도 해마다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임.
 -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예측 가능한 보험료 정보 제공을 통해 소규모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양질의 보험상품을 적절한 가격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연방정부 주도 마켓에서는 약 79천개 이상의 대리인과 중개인이 소비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SHOP 관련 지침에 따라고 있으며, 이러한 에이전트(agents)와 중개인(brokers)을 위한 SHOP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음.

- HHS는 원활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고 연방정부에서 지원되는 SHOP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하면서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절한 건강보험 상품 정보, 보험가격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등록된 중개업자 및 중개인에게 소규모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SHOP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2015년 11월부터는 1-50 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소규모 고용주를 대상으로 연방정부의 온라인 SHOP 마켓 플레이스를 개설하여 영세자영자가 보다 쉽게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거래소를 통한 보험 상품 구매는 사용하기 쉬워야하고 의료비용 감소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보험료율이나 보장범위는 정부의 규제가 아닌 보험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각 주별로 운영되고 있는 SHOP은 영세사업자와 근로자에게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험대라 할 수 있음.
- 비록 ACA에는 수많은 규제와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각 주정부는 기존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정부의 더 많은 규제와 중앙집권적인 운영방식은 영세사업자들에게 경쟁력 강화, 접근성 향상, 비용절감에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음.

2) Oregon State University Center for global Health

○ 일시: 2018.09.24.

○ 면담자: Chunhuei Chi

□ ACA 법에 의해 제정된 소기업 건강 옵션 프로그램(SHOP)은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건강 보험 혜택을 더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별 마켓 플레이스인 SHOP를 통해 영세사업자는 의료보험을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음.

○ 2014년에 시작한 SHOP은 50인 미만 풀타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고 있음. 해당 영세사업자는 언제든지 SHOP에 참여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그들의 직원에 대한 보험을 구입할 수 있음.

□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연방 정부 또는 주정부의 정책을 통해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데, SHOP에서 자격 검증된 중개인 또는 발급 기관을 통해 보험에 등록하는 경우, 일부 영세사업자는 중소기업 건강보험 세액 공제를 청구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약 50% 수준의 보험료 인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2013년부터는 Affordable Care Act 및 주정부에서 운영되는 SHOP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콜센터도 운영 중이며 HHS(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는 HealthCare.gov에 새로운 중소기업 온라인 창을 개설하여 소비자 친화적인 small business health care tax credit 자격여부 확인 등을 지원해 주고 있음.

○ 26세까지의 성인 자녀가 부모의 보험에 계속 머무르도록 허용하거나, 필수 건강 혜택에 대한 가격인상을 제한하고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람에 대한 보험 가입 철회 방지 등 Affordable Care Act는 새로 보험에 가입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민에게 광범위하게 혜택을 가져왔음.

○ 또한 이미 갖고 있는 질환자의 보험 가입 배제를 금지하고 포괄적이고 적절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고용형태의 변화나 직업의 일시적 상실에도 적용 범위에 상관없이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음.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다양한 변동 및 높은 변동성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음.

-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감소는 의사나 병원이 보상되지 않는 진료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의료보험 가입자의 증가는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조정과 결과적으로 의료접근성의 향상을 가져오게 됨.

□ 각 주별 SHOP의 운영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크게 ‘고용주 모델(employee choice)’과 ‘근로자 선택 모델(employer model)’로 나눌 수 있음.

- 먼저 근로자 선택 모델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어떤 형태의 보험을 선택하지에 상관없이 고용주가 일정 금액(fixed amount)의 보험료를 SHOP에 지불하는 형태로 개별 근로자가 보험상품을 결정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근로자 개인이 추가 부담하는 형태임.

- 이러한 형태는 근로자 개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건강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이러한 형태는 현재 메사추세츠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오리건 주를 포함한 나머지 대부분의 주에서는 고용주 모델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용주 모델은 고용주가 단일 건강보험 상품을 일괄적으로 구매하여 모근 근로자가 동일한 상품에 가입되는 것임.

□ 고용주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은 ACA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영세사업자를 위한 SHOP 마켓 관련 법률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은 것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가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큰 이점으로 여겨지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 대부분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저수의 사업체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사업체의 이익과 손실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서류 작업과 규제 부담은 영세 사업장 고용주에게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였음.

- 또한 SHOP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자유 시장 경쟁체계가 구축되어 보험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실제 건강보험 상품들은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사항과 가격규제로 활성화에 한계점으로 작용하였음. 결과적으로 고용주는 정부가 승인한 몇 가지의 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의미 있는 자유 시장 경쟁은 나타나지 않았음.

- 고용주에 대한 세액공제는 SHOP에 등록하는데 큰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했는데 이는 등록과정의 복잡성과 필요한 양식을 완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임. 즉, 영세사업장 고용주에게 세액공제의 활용과 관심이 매우 낮았고, SHOP 마켓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이익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임.
- 연방정부 차원의 SHOP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구축이 지연되면서 연방정부 온라인을 이용하는 32개 주에서도 서비스가 지연되었으며 관련 보험사, 중개인 등의 사업체들도 혼란을 겪었음.
- 주정부 자체 SHOP 마켓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에서도 여러 IT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서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온라인 마켓을 통한 보험상품의 가격 비교, 등록 및 가입 등이 불가능하였음.
- 서비스 제공의 지연과 IT문제는 각 주정부들이 자체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음.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SHOP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3) Oregon Health Authority, Office of Health Analytics

- 일시: 2018.09.25.
- 면담자: Jon Collins, Director,

- 2008년 이후 오바마 정부는 경기부양 및 고용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 급여 세 및 법인세 감면, 사회보장세 감면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시도하였음.
-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payroll tax)는 노령유족장애연금(OASDI: The 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제도에 따라 은퇴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연금보험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함.
- 사회보장세는 직장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와 고용자가 반반 부담하며, 자영업자는 전부 부담함.
-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합하여 FICA 세금이라고 하며, 이는 연방보험기여법(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됨.
- 2010년 3월 18일에 제정된 ‘고용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고용법안(HIRE ACT: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은 실업자 고용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을 담고 있음.
- 2010년 2월 3일 이후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장기실업자를 신규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2013년 사회보장세 감면과 더불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함.
- 실업기간이 60일 이상이며, 실업기간동안 총 근로시간이 40인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자에게 근로자 임금에 대한 사회보장세 부담 6.2%를 감면해줌. 또한, 52주 이상 고용을 지속할 경우 추가로 1000달러의 사업 소득세를 감면해줌.
- 2010년 오바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0년의 세금 감면, 실업보험 재승인 및 고용창출법(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을 제정하고 2011년부터 2년 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한시적으로 감면

하였음.

- 해당 법안은 개인 소득세 감면 및 급여세 감면, 사회보장세 감면, 실업급여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2011년 한시적으로 근로자의 사회보장세는 6.2%에서 4.2%로 2%p 감소하고, 자영업자는 12.4%에서 10.4%로 2%p 감소하였음.
 - 고용주의 사회보장세는 기존 6.2%로 유지되었음.
 - 이러한 사회보장세 감면기간은 ‘2011년 임시 급여세 삭감법(Temporary Payroll Tax Cut Continuation Act)’에 의해 ‘2012년 2월 말까지 연장되었으며, 이후 중산층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2012)’에 의해 2012년 12월까지 연장되었음.
 - 2013년부터 다시 근로자와 고용자는 6.2%, 자영업자는 12.4%로 인상되어 2018년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세가 적용되는 최대 소득금액 또는 세금 상한수준은 매년 상향조정되고 있음.
- 2018년 현재 사회보장세 감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보장세율은 1990년 이후 2011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근로자 6.2%, 고용자 6.2%, 자영업자 12.4%를 유지하고 있음.

〈표〉 미국 사회보장세율

(단위: %, \$)

연도	근로자	고용자	자영업자	소득한도액
2018	6.2	6.2	12.4	128,400
2017	6.2	6.2	12.4	127,200
2016	6.2	6.2	12.4	118,500
2015	6.2	6.2	12.4	118,500
2014	6.2	6.2	12.4	117,000
2013	6.2	6.2	12.4	113,700
2012	4.2	6.2	10.4	110,100
2011	4.2	6.2	10.4	106,800
2010	6.2	6.2	12.4	106,800

- 2014년 1월부터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CA: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혜택을 통한 건강보험료 경

감방안이 행해지고 있음.

- 오바마 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골자로 하며 메디케이드 수급자격의 소득기준을 연방빈곤선 138%미만으로 확장하고,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소득수준이 연방 빈곤선 138%~400% 사이로 보험이 없는 개인이나 가구는 오바마 케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플랜은 매달 지불하는 월 보험료와 의사 방문 시 부담하는 본인부담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등급으로 나뉨.
-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 100~400%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Advance Premium Tax Credit, APTC)의 사전 적용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음.
- 2018년에 적용되는 연간 빈곤선의 400%는 1인 가구 기준 \$48,240, 4인 가족 기준 \$98,400이며, 보험료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2~9.5%를 지불함.
- 보험료 지원 금액의 결정은 실버 플랜을 벤치마크로 하여 실버 플랜가입에 대한 월 보험료가 보험료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금액을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조임.

〈표〉 연소득의 빈곤수준별 건강보험료 상한수준(2018년 적용)

(단위: %, \$)

소득 빈곤 수준	연 소득 범위		보험료 상한수준
	1인 가구	4인 가족	
100 % 미만	12,060 미만	24,600 이하	-
100 ~ 133 %	12,060 ~ 16,040	24,600 ~ 32,718	2.01 %
133 ~ 150 %	16,040 ~ 18,090	32,718 ~ 36,900	3.02 % ~ 4.03 %
150 ~ 200 %	18,090 ~ 24,120	36,900 ~ 49,200	4.03 % ~ 6.34 %
200 ~ 250 %	24,120 ~ 30,150	49,200 ~ 61,500	6.34 % ~ 8.10 %
250 ~ 300 %	30,150 ~ 36,180	61,500 ~ 73,800	8.10 % ~ 9.56 %
300 ~ 400 %	36,180 ~ 48,240	73,800 ~ 98,400	9.56 %
400 % 이상	48,240 이상	\$ 98,400 이상	-

주: 1)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ine)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다른 빈곤 지침을 적용함.
 2) 2018년에 적용되는 보험료 감면 혜택 자격은 2017년 빈곤 지침에 근거함.

- 이와 더불어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 100~250%에 속하는 경우, 본인 부담 의료

비에 대한 보조금도 받을 수 있음.

- 오바마 케어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상한 수준을 설정하고 있어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본인부담액은 2,450달러에서 5,850달러, 두 명 이상 가족의 경우 4,900달러에서 11,700달러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짐.
- 보조금이 없다면 최대 본인 부담금은 개인에게 7,350달러, 두 명 이상 가족에게는 14,700달러가 적용됨.

〈표〉 연소득의 빈곤수준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수준(2018년 적용)

(단위: %, \$)

소득 빈곤 수준	연 소득 범위		본인부담금 상한수준	
	1인 가구	2인 가족	1인 가구	2인 이상
100 % 미만	12,060 미만	16,240 미만	7,350	14,700
100 ~ 150 %	12,060 ~ 18,090	16,240 ~ 24,360	2,450	4,900
150 ~ 200 %	18,090 ~ 24,120	24,360 ~ 32,480	2,450	4,900
200 ~ 250 %	24,120 ~ 30,150	32,480 ~ 40,600	5,850	11,700
250 % 이상	30,150 이상	40,600 이상	7,350	14,700

주: 2018년에 적용되는 보험료 감면 혜택 자격은 2017년 빈곤 지침에 근거함.

- 오바마 케어에 의해 일정 수 이상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때 소규모 기업체에서도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을 제공함.
- 오바마 케어 규정에 따르면 50인 미만의 풀타임 직원을 둔 소기업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정부는 세금 혜택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건강 및 의료복지를 확대를 지원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체의 건강 보험 세액 공제 제도(Small business health care tax credit)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 기관이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고용주가 지불한 건강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세액 공제 혜택 제공하며, 비영리 고용주에게는 35%를 지원함.
- 지원 자격은 전일제 종업원 수가 25명 이하이고, 연평균임금이 5만 달러 미만

(고용주 임금 제외)의 직원 건강보험료의 50%이상을 지불하는 사업체임.

○ 전일제 직원의 기준은 주당 30시간 이상, 연간 120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로 하며, 시간제근무 직원은 주당 30시간미만, 연간 120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로 하여 파트 타임 직원의 경우 모든 파트타임 직원의 총 근로시간을 30으로 나눈 몫을 전일제 직원 수로 적용함.

- 단, 주당 30시간미만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아도 됨.

○ 지원 기준 소득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의해 조정되며, 2014년 51,000달러, 2015년 52,000달러, 2016년 52,000달러, 2017년 53,000달러임.

□ 보험의 제공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SHOP 보험거래소(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 Marketplace)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해야만 세액 공제가 가능함.

○ 고용주는 연간 사업 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혜택이 더 커짐.

- 특히, 연평균 근로소득이 25,000달러 이하인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세액 공제액이 가장 큼.

- 예를 들어,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25,000달러이고, 10명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최소 7만 달러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절반인 3,50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음.

4) Utah Department of Health

- 일시: 2018.09.26.
- 면담자: Norman K Thruston(US representative)

- 미국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크게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대하여 행해졌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사회보장세를 인하하는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며 2014년 오바마 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
- 사회보장세 감면 정책은 경기부양 및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연금 보험료를 감면하였으며, 건강보험료 감면정책은 고용주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음.
- 2010년에 제정된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ACA)법에 의거하여 모든 성인과 50 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해야 함.
- ACA하에서 주정부는 빈곤층을 위한 Medicaid 자격 부여 프로그램을 확대 할 수 있으며 건강 보험 거래소(health insurance exchanges)를 설립하거나 연방 거래소를 활용할 수 있음.
- 거래소는 개인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고 잠재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보험중개인 역할을 수행함.
- 각 거래소(exchange)는 최소 4개 이상의 건강보험 상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거래소는 50인 미만의 상근근로자가 있는 고용주를 위한 보험 상품들도 갖추어야 함.
- 과거 많은 주(州)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보험가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음.
- 소위 "건강보험 구매 협동조합"(Health insurance purchasing

co-operatives, HIPCs)을 만들어 이러한 시도를 하였고 이 중 캘리포니아 주, 코네티컷, 워싱턴, 플로리다, 캔자스, 콜로라도 및 켄터키. 코네티컷 등이 그나마 가장 성공적이었으나 시장점유율은 약 8%로 낮은 수준이었음.

○ 다만 이러한 HIPC 구축에서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보험사의 보험가입기준 (underwriting)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 HIPC에서는 보험가입규제를 금지하였으나 HIPC에 등록되지 않은 외부에서는 보험가입규제가 허용되었음. 그 결과 중개인이 고위험 집단은 HIPC로 가입시키게 되어 HIPC의 의료비용 및 보험료는 매년 증가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배경에서 동일한 보험가입기준을 적용하고 경쟁을 통해 보험료 가격을 낮추면서 연방정부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료보장이 포함된 건강보험상품을 영세사업자 및 근로자들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SHOP를 시행하였음.

○ 중소기업 건강옵션 프로그램 (SHOP)은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장을 위해 설계되었음.

□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Small business health care tax credit)를 실시

○ 특히, 더욱 취약한 영세사업주가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대해 세액공제(Small business health care tax credit)를 시행하였음.

- 영세사업장 중에서도 상근근로자 25명 미만이면서 평균 연봉이 \$50,000이하인 사업자 고용주는 전체 건강 보험료 비용의 최소 50%이상을 세액공제를 보전 받을 수 있음.

- 즉,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수와 평균 연봉으로 결정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규모가 더 영세할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계임.

○ 영세사업장 고용주에 대한 세액 공제는 2010년에 1단계가 시작되었음. 대상 고용주는 근로자 보험료분의 최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전체 직원 보험료의 최소 50% 이상을 지불해야 함.

- 2014년부터 시작된 고용주 세액 공제의 2 단계에서는 적절한 고용주는 근로자 보험료 비용 중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대신 고용주는 반드시 SHOP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서 보험을 구매해야 하며 세액공제는 2년 동안만 인정해 주고 있으며 전체 직원의 70% 이상이 SHOP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보험을 구매하여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짐.
 - 근로자 개인이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는 이 70%기준에 포함되나 근로자의 배우자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거나 정부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같은 보험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음.
- SHOP과 같은 건강보험 거래시스템을 설계함에 있어서 환자중심 또는 소비자 중심의 시스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거래소는 보험 상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러한 정보에 기반한 시장을 통해 개인과 영세 사업자는 그들이 원하는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음.
 - 각 주정부는 거래소에서 메디케이드(Medicaid)나 베이직헬스(Basic Health)와 같은 모든 기존 주 정부 보험 플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5) Intermountain Healthcare Medical Informatics research

- 일시: 2018.09.27.
- 면담자: Peter Haug

- ACA는 적정수준의 의료보장, 의료서비스의 질, 접근성으로 높이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음.
 - 경쟁 시장을 통해 각자 상황에 맞는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가입과 이를 통한 보장성 확대, 근로자 보호가 가능해 졌음. 자영업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켓을 통하여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약 7백만 명이 넘는 어린이, 가족

그리고 일부 개인의 경우 메디케이드 (Medicaid)와 칩(CHIP)을 통해 보험 혜택을 얻었으며 약 3백만 청년들은 그들 부모의 피부양자로서 보험 자격을 획득 하였음.

○ 그 결과 가구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최근 많은 데이터에서도 이러한 의료비 증가율은 감소가 보고되고 있음.

- 카이저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의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전반적인 의료 지출은 역사적으로 낮은 성장을 보였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근 보험료 증가율은 약 1.7%로 이러한 증가는 과거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크게 밀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ACA제정 이후 건강보험 미가입자 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타났음.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무보험자 비율은 2012~2013년대 대비 26%감소하여 약 천 만명 정도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었음.

□ ACA는 시장의 효율성을 가져 오기 위해 SHOP을 설계하였음.

○ 50명 이하의 근로자를 가진 영세사업장의 경우 높은 건강보험료, 높은 행정 비용이 소요되고 변동성으로 인해 보험료 증가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임.

- 평균적으로 1~9명 미만 근로자가 있는 영세사업장은 근로자가 많은 사업체에 비해 약 18%더 높은 보험료를 지출하는 반면 대기업의 경우 평균 보험료는 10%미만이었고 행정비용은 영세사업장에 비해 약 20% 더 적게 부담하였음.

○ 소규모 고용주의 행정 비용이 더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위험예상분을 반영하여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지 않거나 더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기 때문임. 이것은 보험사가 나쁜 행위를 한다기 보다는 보험사의 이윤을 위한 어찌면 당연한 행위라 할 수 있음.

○ 의료비용은 아픈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음. 가장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1% 사람들에게 보험 청구금액의 약 27%가 지출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5%의 가입자에게 보험청구 금액의 약 50%가 지출되지만 건강상태가 좋은 상위 50%의 대상자에게는 보험청구 금액의 약 5%만이 소요됨.

- 즉, 보험사가 무조건적으로 보험가입을 받아들인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최대의 위험부담이 되며 결국 보험가격을 높여 책정하게 됨.
 - 이 같은 이유로 ACA법에서는 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피보험자의 인구, 연령, 지역 및 흡연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하였음.
- ACA가 2010년 법으로 제정되었을 때, 약140만에서 400만명의 고용주가 세금공제 자격이 있었으나 도입 첫해에는 고용주 중 170,300명만이 세액공제 신청을 하였음.
- 각 주별로 SHOP 등록률은 매우 큰 편차를 보였음. 뉴욕 주의 경우 대상자(고용주)는 약100만명 정도였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주의 약 1%만이 거래소에 등록하였음. 캘리포니아도 전체 140만명 중 1%미만의 고용주만이 거래소에 등록하였음.
 - 지원 확대를 위해서 2014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문제로 지연되는 가운데 워싱턴 주에서 SHOP 포함하여 주립 건강보험 거래소를 구축하였으나 카이저 퍼머넌트(Kaiser Permanente)만이 참여하였음. 결과적으로 4300개의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온라인 등록을 하였으나 11개 사업장 총 40명의 근로자만이 실제로 SHOP에서 보험을 구입하였음. 이후 2015년 두 번째 보험 회사인 Moda가 14개의 보험 상품을 추가하였음.
- 세액공제 및 SHOP 등록은 몇 가지 이유로 실적이 매우 낮았음.
- 첫 번째 이유는 서류작업이 매우 복잡하였기 때문임. 서류 작성에 2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되거나 근로자의 세금자료를 모두 수집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를 등록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을 더 소모해야 했음.
 - 두 번째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이 인센티브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음.
 - 셋째,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체는 그간 직원들에게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임. 2010년 ACA가 법률로 제정될 당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83%가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음.

- 마지막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고용주는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이른바 도덕적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급격한 변화를 꺼렸다는 것임.
- SHOP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적절한 금액으로 안정적인 보험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최근 카이저재단의 연구 결과에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보험료는 약 1.2%낮아진 것으로 보고되었음. 향후 소규모 SHOP을 통한 영세사업장의 보험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6) NFP Insurance consulting

- 일시: 2018.09.28
- 면담자: S David Jackson, Russ Johnston, Jonyce Bullock

- 주 법률에 따른 SHOP운영에서는 에이전트(agents)와 중개인(brokers)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대리인 및 중개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임.
- CMS에서는 미국 전역에 SHOP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SHOP에 대한 온라인 기능 향상을 위해 델라웨어, 일리노이, 뉴저지, 미주리, 오하이오 등 5개 주에서 영세사업자, 에이전트 및 중개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음.
- 시범사업의 내용은 영세사업자의 온라인 계정 개설의 용이성, 마켓 플레이스 계정을 만들고, 에이전트/브로커를 계정에 할당, 신청, 자격 결정, 직원 명부 업로드 등을 포함하였음.
- SHOP은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의료보장에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과거 대부분의 영세사업자는 단일 건강보험 상품만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주에서 영세사업장 근로자 옵션을 통해 소기업 근로자가 건강보험 상품(보장범위가 상이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 이러한 근로자별 건강보험 선택은 고용주에게는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는 개인과 가족 상황에 맞는 건강보험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음.

- 즉, 영세사업자(고용주)가 근로자가 선택한 다양한 건강보험 상품에 대한 월간 보험료를 SHOP에 직접 지불하게 됨으로서 행정적인 부담이 감소하였음. 또한 모근 보험사가 SHOP마켓을 통해 경쟁하게 됨으로서 보험료, 고객 만족도,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가져왔음.
 - 각 주별로 고용주와 그 직원 및 부양가족을 위한 보험 상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HHS는 주 보험감독관이 개입하여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분의 주에서는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유사한 수준의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음. 2015년 기준으로 미국 영세사업자의 2/3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건강 보험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
- 영세사업자 및 근로자의 보험가입에 있어 경제성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임. 따라서 ACA법에서 영세사업자 및 저임금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소규모사업장 건강보험 세액 공제(Small Business Health Care Tax Credit)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음.
- 상근근로자 수가 25명 미만이며 상근근로자 평균연봉이 \$50,000(14년부터 인플레이션 조정)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세액 공제(Health Care Tax Credit)를 시행하고 있음.
 - 영세사업장 고용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으나 Affordable Care Act의 시행으로 고용주와 직원들에게 고품질을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새로운 옵션이 제공되었음. Affordable Care Act하에서 새로운 건강보험개혁과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SHOP은 영세사업자에게 양질의 적절한 건강보험의 제공에 새로운 선택권을 주고 있음.
- 소규모 기업은 미국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세사업장 고용주에게 양질의 건강보험을 사업장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임.
- Affordable Care Act 시행 이전에 미국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절반은 영세사업장 고용주, 근로자 및 근로자의 가족 등 관계자였음.
- 소규모 기업 건강옵션 프로그램(SHOP) 마켓 플레이스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의료

비를 낮추고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의료보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음. 아직까지 SHOP은 이러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세액공제 인센티브, 대리인(agent)과 에이전트의 개입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 먼저, 중소기업 건강관리 세액 공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금액도 매우 적다는 문제임.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는 영세사업자가 SHOP에 참여하게 되면 건강관리 세액공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데 2014년 1월 1일에 SHOP 마켓 플레이스가 출시되기 전에는 영세사업자 세액 공제가 민간 보험시장에도 시행되었는데 영리기업의 최대 공제율은 35%였으며 비영리조직은 25%였음.

○ 2014년부터 세액 공제가 증가하였는데,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SHOP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조건이었음. 최대 가능 세액공제는 영리 법인의 경우 50%이고 비영리조직의 경우 35%로 증가되었음.

□ 50%의 세액 공제가 상당한 인센티브처럼 들릴지도 모르나 특히 고용주가 직원 건강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세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해 짐.

○ 첫째, 대상 자격이 되는 고용주의 제한된 범위로 상근 근로자가 25명 이하이고 평균 연봉이 \$50,000 이하인 사업장만 해당된다는 것임. 이는 수많은 영세사업장 고용주가 다소 복잡한 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

- 해당 연도에 근무한 평균 상근 근로자의 수, 평균 연봉이 \$ 50,000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급여를 제한하는 상황도 발생하였음.

○ 두 번째는 공제 세액 구간의 문제임. 최대 세액공제율은 50%(또는 비영리조직은 35%)는 10명 이하의 상근근로자와 평균 연봉인 2만 5천 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 사업장 규모가 커지거나 평균 연봉이 더 높다면 세액공제율은 감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임. 이는 고용주가 세액공제 인센티브 금액을 추정하기에도 매우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셋째, 세액공제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임. 최대 4백만 개의 영세사업장이 세액공제 대상 자격이 있었지만, 일부만이 실제 적용 대상이 되었음.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 따르면 약 17%의 사업자만이 최대 세액공제 대상이었음.

○ 또 다른 한계는 평균 연봉의 적용방식임. 최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영세사업자 68%에서 상근 근로자 수 기준은 맞추었으나 평균 연봉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도시와 시골 지역 간 최소 생활비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음. 많은 고용주들은 세액공제에 대한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세액공제 계산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신해 건강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에이전시 및 중개인의 참여와 인센티브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임.

○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인사업무, 마케팅 디렉터, 컨트롤러 등 매우 다양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브로커의 건강보험 업무지원은 중소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러한 대행사 또는 중개인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와 함께 포괄적인 재무업무, 퇴직 급여, 투자 및 건강보험 관련 업무에 도움을 주고 않는다면 SHOP마켓 플레이스는 성공하기 어려움. 결국 영세사업장을 위한 거래소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개인과 대리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

○ 건강보험 상품은 다른 금융 상품과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하여 보험 대리인 또는 허가받은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함.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정책의 경우, 건강 및 재정적 복지가 근로자 및 가족 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리인과 중개인은 영세사업장 고용주가 자신과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의 가족을 위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SHOP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 중인 유타 주(州)에서도 중개인의 권한, 보상 및 교육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있음. 주 정부의 SHOP 마켓 플레이스를 잘 이해하고 있는 중개인의 경우에도, 주 정부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SHOP 마켓에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험 상품을 거래하는 것보다 거의 2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였음.

- 주정부에서 직접 SHOP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하는 주(州)의 브로커는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특정 교육을 통한 자격을 부여 받아야 함. 하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은 비효율적이거나 부정확하였고 메디케이드와 같은 SHOP 프로그램의 일부만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SHOP에 대해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또한 SHOP 마켓 플레이스를 통한 건강보험상품에 대한 보상 수준은 일반 건강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보상과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중개인들은 까다로운 자격을 요구하는 주정부의 SHOP 마켓에 등록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음.